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기각

이태원 참사 유족들 '눈물'·野 의원들은 '한숨'

현재, 재판관 9명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 선고 일부 쟁점 의견 갈렸으나 "탄핵할 정도 아냐" 유족들 "자식을 죽이는게, 이게 법이냐" 항의

"재판관 전원 9인 기각으로 판단했으므로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국무위원으로 헌정 사상 첫 탄핵 심판을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피판을 면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기각한다"는 말과 함께 선고가 끝나자 유족들은 "이게 법이냐"며 눈물을 보였다.

헌법재판소(현재)는 25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현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기각을 선고했다. 지난 2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날 현재 앞을 선고기 사파되기 이전부터 탄핵에 찬성·반대하는 이들

이 각각 물러 혼잡한 모습이었다. 경찰이 현재 앞과 주변 도로를 통제하며 보행자 통행로를 확보하기도 했다.

심판정에는 일반인 방청객들을 비롯해 참사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방청석 맨 앞줄에 자리 잡은 야당 의원들은 재판관들이 쟁점 별로 탄핵을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힐 때마다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유족들은 비교적 뒷줄에 자리를 잡고 선고를 방청했다. 큰 동요 없이 선고를 들던 이들은 "기각이 필요하지 않냐"며 눈물을 보였다. 일부 유족들은 심판정 앞을 휩쓸며 따지 못하고 로비에 남아 슬픈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①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 및 유가족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를 듣고 참을한 표정으로 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②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선고 직후 유족들과 단체들은 현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한 유가족은 기자회견을 하러 가던 중 "자식을 죽이는게, 이게 법이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국회는 지난 2월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뒤 다음 날 헌

재에 접수했다. 탄핵심판의 쟁점은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장관의 참사 직후 대응 방식 등이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해칠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

렵다고 판단했다.

이 장관의 참사 대응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참사 직후 발언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관들 의견이 갈리기도 했지만, 이것이 탄핵까지 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9명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 /뉴시스



도의회-굿네이버스 아동권리정책 간담회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 신호 자동연장 신호등 설치 등 제안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와 굿네이버스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조자영)은 25일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ain) 단원들이 제안하는 정책제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굿모션 단원 53명을 비롯해 전북도의회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 김경환 본부장, 굿네이버스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조자영 관장,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 조영경 관장,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김미선 관장, 전주용유초등학교 심정주 교장, 전주북일초등학교 박성임 교장, 완주봉서초등학교 정영욱 교감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포함한 70여 명이 함께했다.

굿모션 단원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2023년 상반기 동안 전북도 내에서 침해된 아동권리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이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정책을 스스로 탐구하고 정리해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굿모션 단원들은 교통약자의 보행용 교통시호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문화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 신호 자동 연장 신호등 설치를 제안했고, 깨끗한 학교 주변 환경 및 분리수거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밖 100m 이내에 쓰레기통 및 분리수거함 추가 설치를 촉구했다.

또한 올해로 시행 15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정책 당사자들에게조차 잘 알려지지 못한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부모 및 학생들에게 위치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운영 기관을 확대하며, 운영 기관 종사자들에게 대한 정례적인 아동 안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재훈 기자

어린이 안전 확보 전반적인 사항 규정

김슬지 도의원 발의 '어린이 안전 조례' 도의회 본회의 통과

도내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 교육과 관리, 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김슬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402회 임시회에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조례안에서 정한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이며,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특히,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사고와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면서 시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이용시설을 통한 교육·어린이 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보급(어린이집 학

교 등)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또한,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홍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어린이 안전사고 유발요소 제거 △도지사가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명시해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정부와 타 지자체 등과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교류·협력에 관한 관계 구축과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해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슬지 의원은 "도의회에서 최종 의결돼 공포됨에 따라 도 차원에서 어린이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 향후 어린이 안전수준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례 통과 의미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 도내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전북도의회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호우피해 현장 찾은 김기현 국회의원 대표 25일 익산 호우 피해 현장을 찾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피해 복구 활동을 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사진=익산시청 제공, 관련기사 7면)

"거리의 무법자... 민원 '폭증' 행정은 '뒷짐'"

이명연 도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관련 민원 2022년 1067건 전년보다 9배 늘어 도, 개별 법령 부재·시군 사무라는 이유로 '무대응'으로 일관... 도민 안전 확보 시간 허비"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 10)은 지난 24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로 인해 도민의 안전과 통행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전북도는 뒷짐만 친 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명연 의원에 따르면,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관련 민원은 폭증했다. 2021년 119건이었던 관련 민원은 한 해 만에 무려 9배가량 증가한 1,067건에 달했다. 이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만 포함된 것으로, 시군별로 개별 접수된 민원을 더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명연 의원의 주장이다.

이명연 의원은 전북도의 대응을 핑계행정과 느장행정으로 요약했다. 먼저 핑계행정이다. 2021년 5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 규정이 대폭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된 후, 서울, 경기, 세종 등은 주차구역 설치에 나섰으며, 서울과 광주를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할 수 근거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전북도는 개별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시군 사무라는 이유로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느장행정의 대표적 사례는 법정계획인 제4차 지역교통안전기 본계획을 광역 시도 가운데서 가장 늦게 수립하고 공고한 것이다.

2021년 10월까지 지역교통안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며, 2022년 2월 전후에 맞춰 최종 확정해 국토부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전북도는 국토부 공문을 지의적으로 해석해 용역 수행 기간을 1년동안이나 중지했다는 것.

이명연 의원은 '제4차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해야 하는 지역교통위원회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관련 조례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그간 지역교통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해오다가 작년 12월에서야 부랴부랴 위원 위촉에 나서면서 시간을 또 허비했다는 것이다.

이명연 의원은 "일련의 느장행정 결과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예산 미편성과 사업 미수행으로 이어졌음은 물론이거니와 법정계획의 확정 공고를 지연된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통행권을 확보할 소중한 시간이 낭비됐다"면서 만시지탄이지만 전북도가 이제라도 명백한 과실을 인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나인권 도의원 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북도의회가 지난 24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북 지역상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 농산업경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구매, 공사 및 용역 시행 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산 판매하는 상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며 지역상품과 업체 등에 관한 정보를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지사는 전북도와 관내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지역업체가 생산한 우수

자재나 물품에 대해선 설계단계부터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이밖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업무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북도는 소관부서와 계약총괄부서, 사업부서의 과장 팀장급으로 구성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게 된다.

협의회는 지역상품 구매촉진과 구매계획 및 실적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협의 기능을 가지며 구매촉진 우수 공공기관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담았다.

우선구매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전북도와 도의회, 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 도 보조금 단체 등이 해당된다.

지역상품의 기준은 6개월 이상 도내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직접 생산 판매하는 물품, 용역, 공사를 말한다.

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내 우수 지역상품이 관료화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내비쳤다. /김재훈 기자

김제시의회, 정책개발 정책연구회 최종보고회

김제시의회 '정책개발 및 정책연구회' (대표의원 김주택)는 25일 김제시주요 조례 정비와 관련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정책개발 및 정책연구회는 올해 3월 김주택, 김영자, 황배연, 오승경, 문순자, 전수관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5개월간 연구모임을 이어오면서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의 총 235개의 조례(경제복지국 92, 안전개발국 49, 개발사업단 20, 농기센터 45, 의회 20, 기타 9)를 연구 대상으로 정하고 분석해 문제점과 정책시행방향을 파악하고 개정 의견 및 발전 방향을 도출해왔다.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지방자치의 정연구원 최민수 대표의 "지역의 현안, 행정의 문제점,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파악하고 논의를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처방하는 것이야말로 기초의회의 의정활동의 핵심이며, 조례의 체계적인 정비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여러번 강조했다.

정책연구회 김주택 대표의원은 "오늘 최종보고회로 연구단체의 활동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조례를 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권리와 안정적 삶을 도모하며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는 의회, 선도하는 의회, 저력 있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태 기자